

연말연시 다시 고개드는 음주운전

‘윤창호법’ 불구 광주 음주사망사고·적발 증가

경찰, 시간·장소 불문 ‘스팟이동식’ 단속 강화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 시행 이후 주춤하던 음주운전이 연말연시를 맞아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특히 송년회 등 개인 모임이 잦은 연말에 음주운전 적발건수가 많은 만큼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8일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광주지역 교통사고 사망자가 전년 대비 32.4% 줄고, 2년 연속 30% 이상의 감소율을 기록했다.

대부분 지표에서 사망사고가 감소했으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는 지난해 4명에서 올해 5명(12월15일 기준)으로 오히려 소폭 증가했다.

이는 음주운전 단속기준과 처벌이 강화된 일명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난해 12월18일부터 올해 12월15일까지 음주운전 교통사고 건수와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나란히 감소했음에도 나타난 현상이다.

윤창호법 시행 이후 약 1년간 광주에서는 515건의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발생해 전년 동기 대비 24.4% 감소했다.

음주운전 적발 건수도 총 4천24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7.5% 줄었다.

하지만, 술자리가 잦은 연말연시가 다가오면서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17일 오후 10시16분께 광주 서구 화정동 한 주택가 도로에서 A(31)씨가 몰던 승용차가 주택 담벼락을 들이받는 사고가 일어났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사고 당시 A씨는 운전면허 취소에 해당 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99%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지난 7일에도 광산구 한 상가 골목길에서 술을 마신 30대 남성이 차를 들이받은 후 카페로 돌진하는 사고

가 발생했다.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면허 취소 수치의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광주지방경찰청은 술자리가 잦은 연말연시에 음주운전 분위기를 사전 차단하고,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음주운전 특별단속에 나선다.

지방청, 경찰서, 기동대 등 가용경력을 총동원해 주·야간은 물론 심야에도 장소를 불문하고 ‘스팟이동식’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연말연시에 들떠 발생할 수 있는 음주운전 분위기를

사전 차단할 방침이다.

또, 2020년 교통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보행자 안전확보에 집중하는 한편, 음주운전 단속과 배달대행 이륜차 보호 활동에도 집중할 계획이다.

광주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닌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는 것을 명심해야 하고, 음주 약속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대중교통이나 대리운전을 이용하고 음주운전을 해서는 절대 안된다”고 당부했다.

/최환준기자



광주경찰이 연말연시를 맞아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펼치기로 했다. 사진은 출근길 숙취 음주운전 단속 모습.

‘강제징용’ 문희상案 ‘1+1+α’ 법안 강력 반발

시민단체, 국회의원 295명에 “발의 찬성 말라” 경고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 해법을 담은 문희상 국회의장의 이른바 ‘1+1+α(알파)’ 법안을 두고 시민사회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18일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에 따르면 전국 23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강제동원 문제해결과 대일 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은 전날 현역 국회의원 295명 전원에게 “발의에 찬성할 생각을 하지 말라”는 팩스를 보냈다.

이들 단체는 “문 의장의 법안은 강제동원 피해자의 인권을 짓밟고 일본에 전횡범죄 면죄부를 주는 법안”이라며 “박

근혜 정부의 위안부 합의보다 더 나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의원님께서는 절대 공동발의자로 참여하면 안 되고 이후에도 찬성하면 안 된다”며 “만약 그렇게 되면 피해자들과 시민들의 거센 항의와 함께 의원님도 ‘불매’ 대상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나는 거지가 아니다. 우리나라를 무시하는 식으로 그렇게는 받지 않겠다”는 근로정신대 피해 당사자인 양국덕 할머니의 입장도 서한에 담았다.

광주·전남 지역을 중심으로 한 51개 시민단체도 지난 16일 광주를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 8명에게 같은 내용의 팩스 서한을 발송하기도 했다.

문 의장은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해법으로 한일 양국 기업과 국민들의 성금으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방안을 법안으로 만들었다.

피해자가 위자료를 받으면 확정판결에 따른 강제집행 청구권 또는 재판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고 손해배상청구 사건 재판 중인 경우 ‘소 취하’를 조건으로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강제징용 피해자와 그들을 돕는 시민단체는 “사죄 없는 배상은 의미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김동수기자

“박근혜 증인 불러달라” 법원, 최서원 요청 기각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가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박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요청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백승엽 조기열 부장판사)는 18일 열린 최씨의 파기환송심 두 번째 공판에서 “검토한 결과 증인 신청을 채택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씨 측은 지난 10월 열린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딸 정유라씨,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과 손석희 JTBC 사장 등을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요청했다. /연휴뉴스

광주서 상점·주택에 차량 돌진 사고 잇따라

음주운전이나 차 사고로 상점과 주택으로 차량이 돌진하는 사고가 잇따랐다.

18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16분께 서구 화정동 한 주택가 도로에서 A(31)씨가 몰던 승용차가 주택 담벼락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벽돌로 된 담이 주택 마당 쪽으로 무너졌다.

A씨는 사고 당시 운전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99%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전날 오후 10시10분께에는 남구 주월동 편도 4차선 도로에서 60대 운전자 B씨가 운전하던 승용차가 애견숍으로 돌진했다. 차로변경 과정에서 20대 운전자 C씨의 승용차와 옆면을 부딪치고 차량을 세우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와 C씨 모두 음주운전을 하진 않았지만, 경찰은 사고 처리 과정에서 C씨

가 벌금 150만원을 내지 않아 수배가 내려진 것을 확인하고 C씨를 현장에서 체포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김동수기자

아파트 화재…거주자 숨진 채 발견

18일 낮 12시12분께 순천시 조례동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119상황실에 접수됐다.

119 소방대가 17분 만에 불을 끄고 집안을 수색해 거실에서 숨져있는 A(50)씨를 발견했다.

이 집에는 A씨 혼자 살고 있었다.

불은 A씨가 발견된 거실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씨 시신 부검을 의뢰하고 소방당국과 합동으로 화재 원인을 파악 중이다. /순천=남정민기자

‘강제추행 혐의’ 유두석 장성군수 무죄

주민들과의 회식에서 여성 주민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두석 장성군수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박남준 부장판사는 18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유 군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박 부장판사는 “사건 발생 6개월 후 여성 주민이 신고해 수사가 이뤄졌는데 현장에 있던 사람들 대부분이 기억을 잘 하지 못했으나 피해자인 주민 등 2명만 구체적인 시간, 대화 내용을 진술했다”

며 “모두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이었고 피해자인 주민은 상대 후보 선거사무원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는 1차 기자회견에서 허벅지, 2차 기자회견에서 왼쪽 허벅지를 언급했으나 이후 수사기관에서는 오른쪽 허벅지를 피해당했다고 진술했다”며 “순간 착오가 있었을 수 있지만, 기자회견을 준비하며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피해 부위 진술이 달라 피해자 진술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오송지기자

‘별장 성접대’ 피해 여성, 김학의·윤중천 재고소

이른바 ‘별장 성접대’ 의혹과 관련, 피해 여성과 시민단체들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 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한국여성연대 등 706개 시민단체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 여성이 김 전 차관과 윤씨를 강간치상 등의 혐의로 경찰에 재고소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9년 검찰 과거사위 권고

에 따라 재수사에 착수한 특별수사단은 윤중천에 대해서는 수년에 걸친 성폭력 사건 중 극히 일부만, 김학의에 대해서는 뇌물죄로만 ‘면피용 기소’를 하는 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원도 1심 선고에서 윤중천에게 면소 및 공소기각, 김 전 차관에게 공소시효 완료로 인한 무죄를 선고하면서 사건 판단을 유보하고 책임을 회피했다”고 주장했다. /연휴뉴스

“명품 패딩 입었다(?)”

○…명품 패딩을 훔쳐 달아난 고등학생들이 자신의 SNS에 훔친 패딩을 입은 사진을 올렸다가 경찰에 걸렸다.

○…18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A(16)군 등 2명은 지난달 3일 서구 한

백화점 명품 의류 매장에서 168만원 상당의 패딩 1개를 훔친 혐의.

○…경찰 관계자는 “조사 결과, 이들이 손님이 것처럼 매장 직원에게 여러 가지를 물어보며 주의력을 떨어뜨린 후 진열대에 걸려있던 옷을 몰래 들고 나온 것으로 드러났다”며 “사건 당일 전날에도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더니,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호통. /김동수기자

부동산경매 기초부터 전문가까지 완성

- 경매전문 “법무법인 로뎀” 법무실장
- 조선대 평생교육원 ‘부동산경매과정’ 전담교수
- 부동산공인중개사협회 실무교육 강사
- 호남대학교 대학원 부동산학과 겸임교수
- 전남 교육연수원 “재산관리와 생활법률” 강사

※부동산경매 더 이상 실전강의는 없다※

- 부동산경매 사고방지를 위한 관련법률(판례)
- 부동산 신통사기 대처법과 함정물건 특수분석

※수강후에도 동호회가입 지속적인 정보교류※

경매 기본이론과 사례별 권리분석 및 실무강의		
과 정	부동산 초보자부터 전문가까지 마스터과정	
시 간	매주 화요일	주간) 15:30 ~ 17:30
		야간) 19:00 ~ 21:00
수강료	8주 : 120,000원	
개 강	2019. 12. 24. 화요일	
접 수	2019. 11. 11. - 2019. 12. 20. 까지	
접수처	조선대학교평생교육원 행정실 또는 홈페이지 <http://www.chosun.ac.kr/lifelong>	
대 상	1. 부동산에 관심은 있으나 자신이 없는 분 2. 부동산 관련 법률용어조차 전혀 모르신 분 3. 기본적인 상식만으로 경매에 종사하고 계신 분 4. 경매전문가로서 더 깊은 권리분석을 원하신 분 5. 노후대책 및 업종변경을 위한 부동산 재테크	

조선대학교평생교육원
수강신청 062)230-7700~2 (인터넷신청)

원룸, 빌라, 주상복합부지]

- 1) 오치동 2중주거 6미터 대302㎡ 급매5억 (3.3㎡당549)
- 2) 두암동 2중주거 8미터 대281㎡ 급매4억 (당470)
- 3) 북동 중심상업 4미터 806㎡ 급매12억2,000 (당500)

[다용도 토지]

- 1) 하남산단 공업지 10미터코너 8,265㎡(3.3㎡당200)
- 2) 화순 의료단지설 전원단지조성지661㎡(3.3㎡당 45만원)
- 3) 지원동(월남)도접 주거1종 3,222㎡(3.3㎡당 350만원)
- 4) 장성,산정리 도접 주거1종외9,900㎡(3.3㎡당 40만원)
- 5) 신가동 도접 주거1종7,000㎡(3.3㎡당 250만원)

[월세많은 빌딩]

광주약원 병원상업지838㎡5층건물 승강기2,주차20
급매24억3,000(보1억 월1,800만원)

***상가빌딩, 모텔, 가든, 내대지

지방, 섬광동 투자 손님 다수 대기중입니다

연락주시면 바로 처리하여 드리겠습니다

급매전문 즐거운공인중개사무소 대표공인중개사 유재관 010-6495-3787

광주 북구 임동480 LH주공아파트 옆 동운고가입구

현대공인중개사

치평동 상무우리병원에서 50m

☎ 370-1900 ☎ 010-2006-0115

〈광주인근 지역 매매 물건 구함〉

(장성 담양 나주 화순 함평 곡성)

물건의 종류 : 건물 / 대지 / 임야 / 전답 / 기타

〈광주지역 매매 임대물건 구함〉

물건의 종류 : 건물 / 토지

〈급매물 단 시일 내 책임중개〉

대표 공인중개사 김학제